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8.(일)

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08.(일) 이데일리는 「내년에 25조 쏟아붓는 기초연금...생계급여 깎여 노인빈곤 개선 '헛바퀴'」 기사에서,

○ "기초연금이 올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서 최종 가처분소득은 달라지지 않으며", "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취약계층 노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장부상 현금 이동만 발생하는 셈이다"며,

○ "생계급여 산정 때 기초연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등의 제도 보완이 없다면 하후상박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실정"이라고 보도하였음.

< 정부입장 >

1 **노인 소득하위 30% 어르신**(약 348만명) 중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어르신의 수는 **1/4 수준**('25년 기준 78만명)에 해당하고,

○ 그 외 **3/4 수준의 어르신**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아,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연금 **인상 효과를 온전히 수혜**(1인 기준 월 최대 +3만원 인상) 가능합니다.

2 생계급여는 가구의 **각종 소득·재산을 종합 반영**하여 **그 부족분을 보충**하는 **최후의 안전망**인 만큼

○ 생계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의 일부를 **소득에서 빼주는 형태**의 제도개선은 생계급여의 **보충성 원칙**, **청년·중장년 생계급여 수급자 등과의 형평성** 등을 감안할 때, **신중할 필요**가 있습니다.

3 다만,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**기준 중위소득 인상**(+6.7%)을 통해,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이 월 최대 **+5.5만원**(82.1→87.6만원), 2인 가구의 경우 **+9만원**(134.4→143.4만원) 증가하여

○ 일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 차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**노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액**은 **전년보다 상당폭 증가**할 전망입니다.

4 정부는 기초연금 **하후상박 개편의 일환**으로, 저소득 노인(소득하위 30%) 기초연금액 **월 최대 3만원 인상** 外에도

○ 기초연금 **부부감액률 인하**(△20→△10%)를 통해, 소득하위 30%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**'26년 대비 월 최대 12.4만원**(56→68.4만원) 인상하였으며,

○ 향후에도 **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**해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 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희 (leet88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